

2019년 경제정책방향

66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99



2019년 경제정책방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 | | |
|----|------------------------------------|---|
| 01 | 민간투자 지원,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1 |
| 02 |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2 |
| 03 | 소비·관광 불업을 통해 경제에 온기가 들게 하겠습니다 | 3 |
| 04 |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뚝 서겠습니다 | 4 |
| 05 |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5 |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 | | | |
|----|----------------------------------|---|
| 01 | 규제개혁의 물꼬를 틀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 6 |
| 02 |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일자리 창출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7 |
| 03 | 유망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8 |
| 04 |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 9 |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 | | |
|----|------------------------------------|----|
| 01 | 서민·자영업자의 짐을 덜어드리고, 재기 기회는 강화하겠습니다 | 10 |
| 02 | 희망사다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 11 |
| 03 |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12 |
| 04 |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 13 |
| 05 | 정정당당한 경쟁과 경제주체간 상생을 지원하겠습니다 | 14 |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 | | | |
|----|--------------------------------|----|
| 01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15 |
| 02 |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17 |
| 03 | 남북경협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18 |
| 04 | 중장기 비전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 18 |


01 민간투자 지원,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 행정절차 신속 처리 등을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추진

	프로젝트별 추진계획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1.6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3.7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유발 저감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
 자동차 주행시험로 (0.2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기준 테스트를 위한 3.5km 이상의 직선주행시험로 설치
 서울 창동 K-POP공연장 (0.5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등을 바탕으로 K-Pop 공연장 설치

- 제도개편 등을 통해 6.4조원 + α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 조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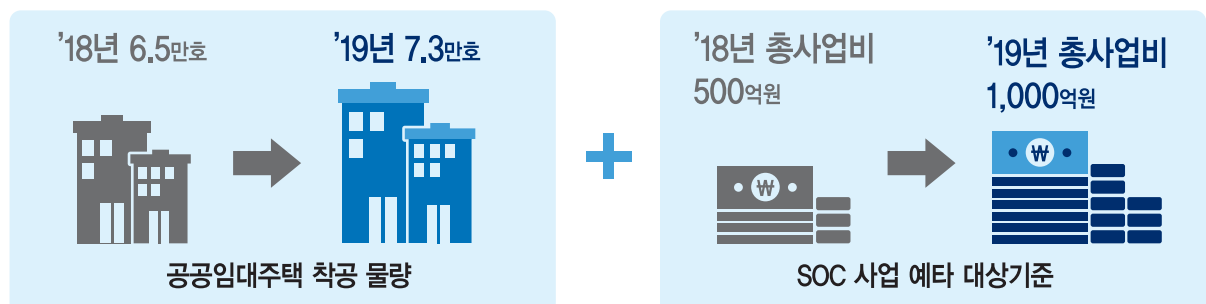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1.5조원+ α), 항만개발,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4.9조원+ α)

-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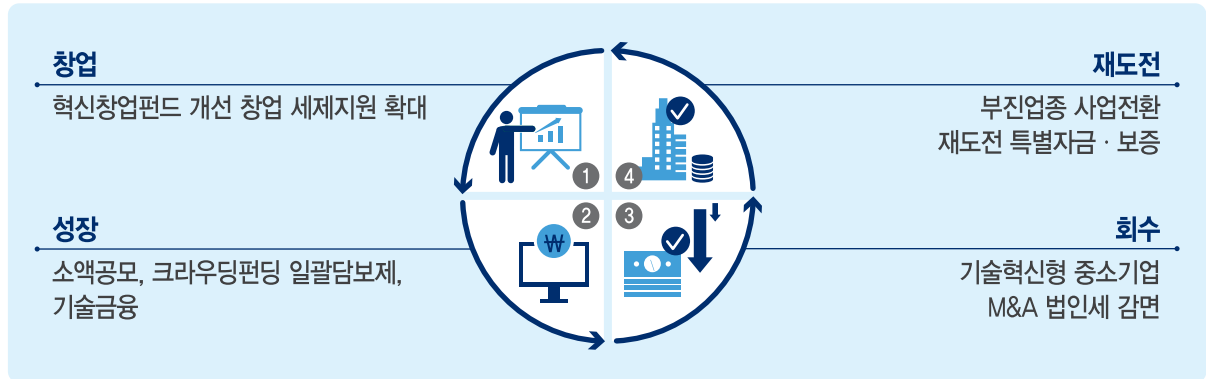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10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5조원), ICT 투자지원 펀드(1.2조원)

지역·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 내년 1분기 중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중 조기 사업착수
- '19년 공공임대주택 착공 물량을 0.8만호 확대추진하고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노력



02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 | 혁신창업펀드(2조원) 초기비중(업력1년 ~ 3년) 지원확대('19년, 50% → 100%)

- 창업목적의 자금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 확대 · 요건완화,
- 낙후지역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 · 소득세 감면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증여세 | 범위: 31개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 조건: 1년 → 2년 이내 창업, 3년 → 4년 이내 사용
법인세 · 소득세 | 투자금액 기준 인하, 감면한도가 근로자수 비례로 설정

성장 | 소액공모(10억원 → 100억원) · 크라우드펀딩(창업7년 이내 → 모든기업) 확대,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도입 등 기업 자금조달 지원

- 일괄담보제 도입,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활성화 위한 가치평가 · 회수지원시스템 구축, 우수기술 보유기업 금융지원 확대

일괄담보제 | 부동산 담보가 부족해도 동산, 채권, 지재권 등 묶어 담보 활용
기술금융 | 기술금융펀드(향후 4년간 5천억원) 조성 → 우수기업 투자 확대

회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시 법인세 감면기한 연장('18년말 → '21년말)

- 벤처기업 매각 회수자금 재투자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재투자금액 의무비율 완화(양도대금 80% → 50%), 재투자기한 연장 신고기한일로부터(6개월 →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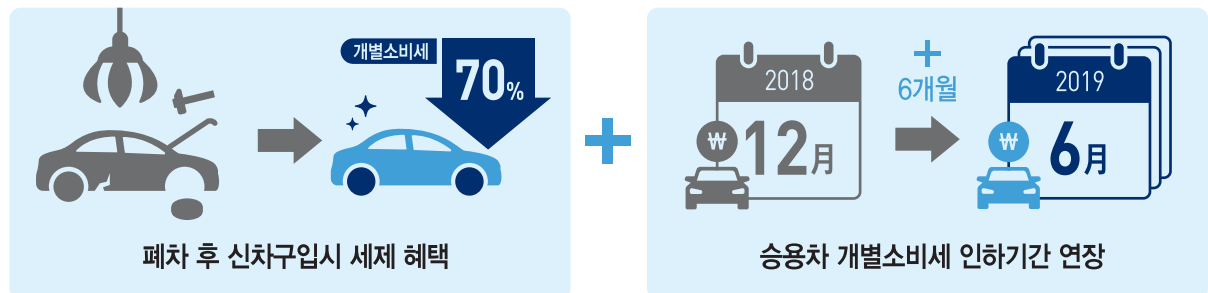
재도전 |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지원 위한 사업전환지원사업(중진공)의 용자 거치기간 연장(시설자금 4년 → 5년, 운전자금 2년 → 3년)

- 연체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 · 보증' (중진공 500억, 소진공 100억, 기보 300억) 통해 재기 가능성 제고

03 소비 · 관광 불업을 통해 경제에 온기가 들게 하겠습니다

소비심리 제고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5% → 3.5%)을 '19년 6월까지 연장
-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원 한도, 1년 한시)



- 제로페이와 연동,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 상향(현행 30% → 40%)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지속 확대

발행규모 확대 | ('17년) 1.1조원 → ('18년) 1.5조원 → ('19년) 2.0조원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고향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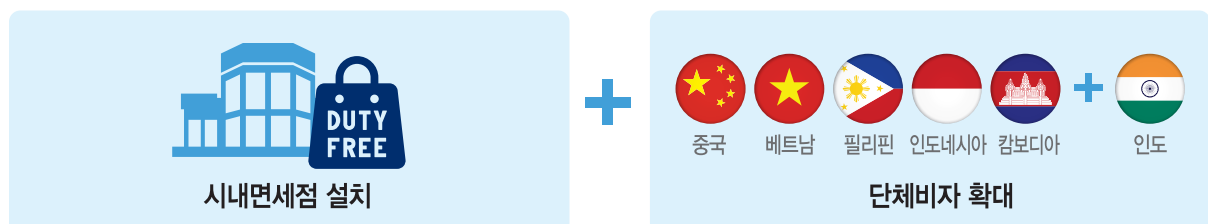
10만원 이하 | 전액 10만원 ~ 1천만원 이하 | 16.5% 1천만원 초과 | 33%

국내관광 활성화

-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상 · 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과 연계
- 산악 · 해양자원, 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개발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 휴양관광특구” 도입
종합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위한 “K-Ocean Route” 조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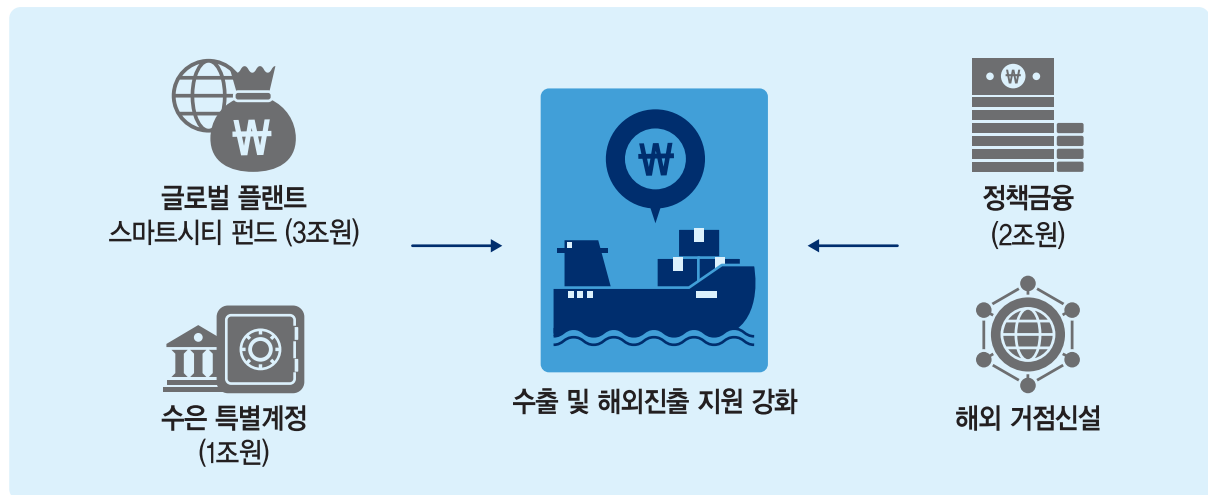
-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 단체비자를 인도까지 확대 제공(단체비자 허용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04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뚝 서겠습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사업 위험도(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에 따라 펀드, 정책자금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 · 스마트시티 펀드 신설(중위험), 2조원 정책금융(고위험), 1조원 수은 특별계정(초고위험)
-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시 현지 투자자 · 기업 · 대학과 연계 지원



신북방 · 신남방 등 대외협력 강화

- 교역다변화를 위해 PA, CPTPP 등 다자간 협정에 적극 대응
- 한-러시아 서비스 · 투자 FTA 협상 개시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한-영 FTA 추진



05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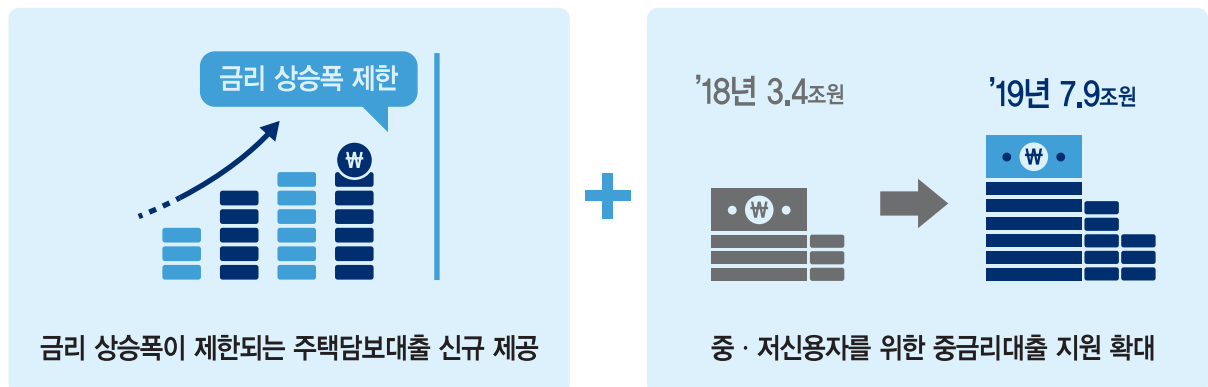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 역대 최고수준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1%) 실시
- '18년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정산분 전액을 결산 즉시 지자체 · 지방교육청에 지급(4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 기업 부담 완화

-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제공
- 중 ·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지원 확대



- P - CBO(회사채 담보부증권) 공급 규모를 0.6조원 확대('18년 2.1조 → '19년 2.7조원)
-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은행 여신의 가계 · 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해소하여 기업금융 활성화 유도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가계여신 편중리스크 평가 신설, 가계 · 기업대출 예대율 가중치 차등화(가계 100% → 115%, 기업 100% → 85%) 추진

01 규제개혁의 물꼬를 틀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숙박 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 연 180일 이내 내국인 대상 허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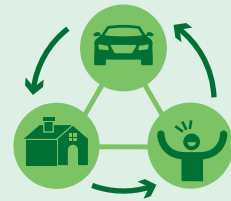
(현재) 농어촌 : 내 · 외국인, 도시 : 외국인 허용 (개정) 농어촌/도시 모두 내 · 외국인 허용

- 대여 · 반납구역 제한없는 카셰어링 서비스 시범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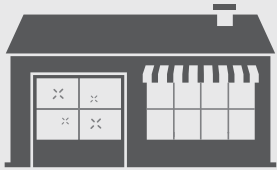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실시

규제혁신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공유 공간으로 개방 추진



폐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만성질환자 맞춤형 케어플랜 → 스마트폰 등 비대면 모니터링



환자의 건강 · 생활을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교육 · 상담 등 서비스 제공



비대면 모니터링



맞춤형 교육 · 상담

낙후 접경지역 규제 완화

-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대폭 해제하여 투자기반 조성



여의도 116배 면적(경기 1억1천만㎡, 강원 2억 1천만㎡ 등) 보호구역 해제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 창출

- 비수도권 지역에 지역혁신성장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신설


02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 · 일자리 창출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력산업 경쟁력 · 생산성 제고

- 제조업 혁신전략 마련('18년 12월) → 4개 분야 우선 집중지원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마스터 플랜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업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신설 • 친환경차 보급지원 확대(전기(3.1만대 → 4.2만대) · 수소차(746대 → 4,000대))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선박 초기시장 창출('25년까지 140척(1조원) LNG선 발주) • 수소연료 선박('19년 ~ '23년, 420억원), 자율운항선박('20년 ~ '25년, 5천억원 예타추진) R&D 지원, 중소 조선사 · 기자재업체 1.7조원 금융지원('19년)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 · 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규모 R&D 투자지원('19년 ~ '25년, 5,281억원)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19년 ~ '23년, 90만평) • 공업용수 공급 안정화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19년 ~ '21년, 2,306억원)

- 기업활력법 개편 → 부실발생 前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부실기업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기업활력법 일몰 연장('19년 8월 → '24년 8월)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은 조기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

新기술 · 新산업 창출 지원


- 8대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4대 신산업에 대해 재정 · 세제 · 제도 등 집중 지원

 스마트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산업 '19년 2개 시범사업, '22년까지 10개 조성 • 개별 스마트 공장 '19년 4천개, '22년까지 3만개 보급
 미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차 도심주행 위한 자동차 · 교통상황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실증사업 2개 지역 추가 선정(현재 서울, 제주 2개 도시 추진중) •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 수립('19년 1/4)
 핀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 결제수수료 절감 • P2P 대출의 신뢰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해 P2P법 제정
 바이오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최적화 등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R&D •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 위해 해외 임상시험(3상) R&D 세액공제

- AI · IoT · 로봇 등 신기술 활용한 모델발굴 → 융복합 신시장 창출


 예시 | IoT 가전기반 스마트홈 기술개발 사업,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창출 지원

– 4개 분야(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첨단소재)공공기관 – 기업 공동으로 산업플랫폼 선도 프로젝트 추진

 예시 | 각 병원에서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익명화하여 플랫폼을 통해 공유 → 개인맞춤형 정밀의료, 임상기반 신약개발 등 비즈니스 가능

03 유망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입법(’19년 1/4)





 **예시** | 5년단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R&D, 창업·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핵심 추진과제 및 규제개선 건의 등 발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육성

- 4대 분야 혁신전략 수립

	4대 분야 혁신전략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한류·공연·해양레저 등 관광콘텐츠 확충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등 마련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케어 빅데이터 구축 • 의료·정보 융복합 교육기관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 헬스케어 특화 창업 지원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성장단계별(창업, 도약, 재도전) 맞춤형 지원 확대 • 홍보·현지화 등 해외진출 지원 • 공정한 제작·유통 생태계 조성 등 추진
 스마트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국가인증 → 공공자금 우선지원) 도입 • 해상물류 자동화·지능화 등 물류시스템 스마트화 추진


유망 新직업 관련 법령 제·개정, 자격제도 신설 등 추진

 **新직업 예시** | 유전체 분석가, 치유농업사 등

유망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문인력 확보 추진

04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전환 추진

 **인프라 확충** | 직급 제공범위 확대 등 임금시스템 개선, 직무급 도입 매뉴얼 마련
컨설팅 강화 | 임금·평가체계 개선 컨설팅 (400개 기업), 교육 등 사후관리


-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마련
(경사노위 內 관련 위원회 설치·지원, '19년)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



- 노사합의 통한 지역일자리 모델 마련시 법률상 지원근거 마련

 연내 지원체계 구축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 →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 지역별 다양한 노사상생협 일자리 모델 논의 촉진·발굴

 **예시** | 지역 노사민정이 합의·신청 → 심사위(중앙정부) 모델 심사후 지원여부 결정
→ 지역 특성·수요 맞춘 다양한 모델 지원

- (근로자) 정주인프라·실질 소득증대 지원 (기업) 인센티브 우대지원

 **예시** | 공동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대출, 교통비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 마련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기금** |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 통합운용, 운용수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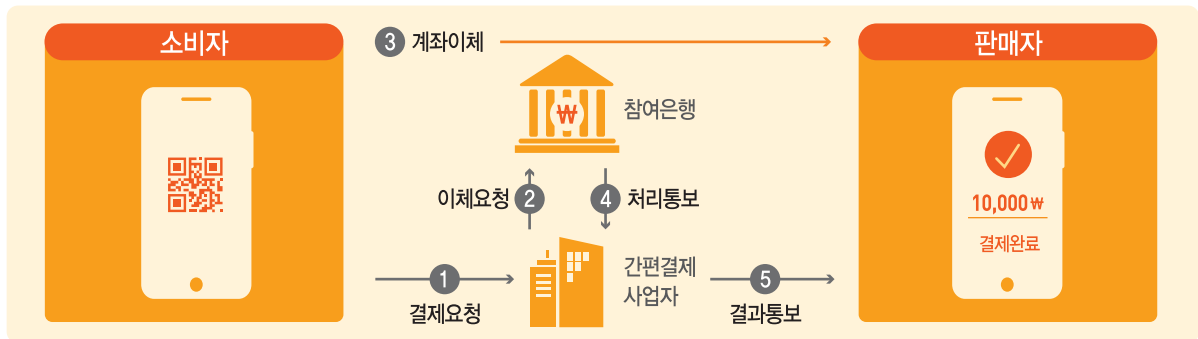
-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 기금 출연시,
출연금 10% 세액공제 추가 등 세제지원 확대

01 서민 · 자영업자의 짐을 덜어드리고, 재기 기회는 강화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영세업자 부담 경감

- 결제수수료 0%대의 소상공인페이 서비스 본격 개시

매출액	0~8억원	8~12억원	12억원~
결제수수료	0%	0.3%	0.5%



- 영세 ·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연매출	5 ~ 10억원		10 ~ 30억원	
카드 수수료	현행	개선	현행	개선
	2.05%	1.40%	2.21%	1.60%

- 개인사업자(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등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

부가가치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결제액 × 공제율(1.3% ~ 2.6%)	
	현행	개선
	연간 최대 50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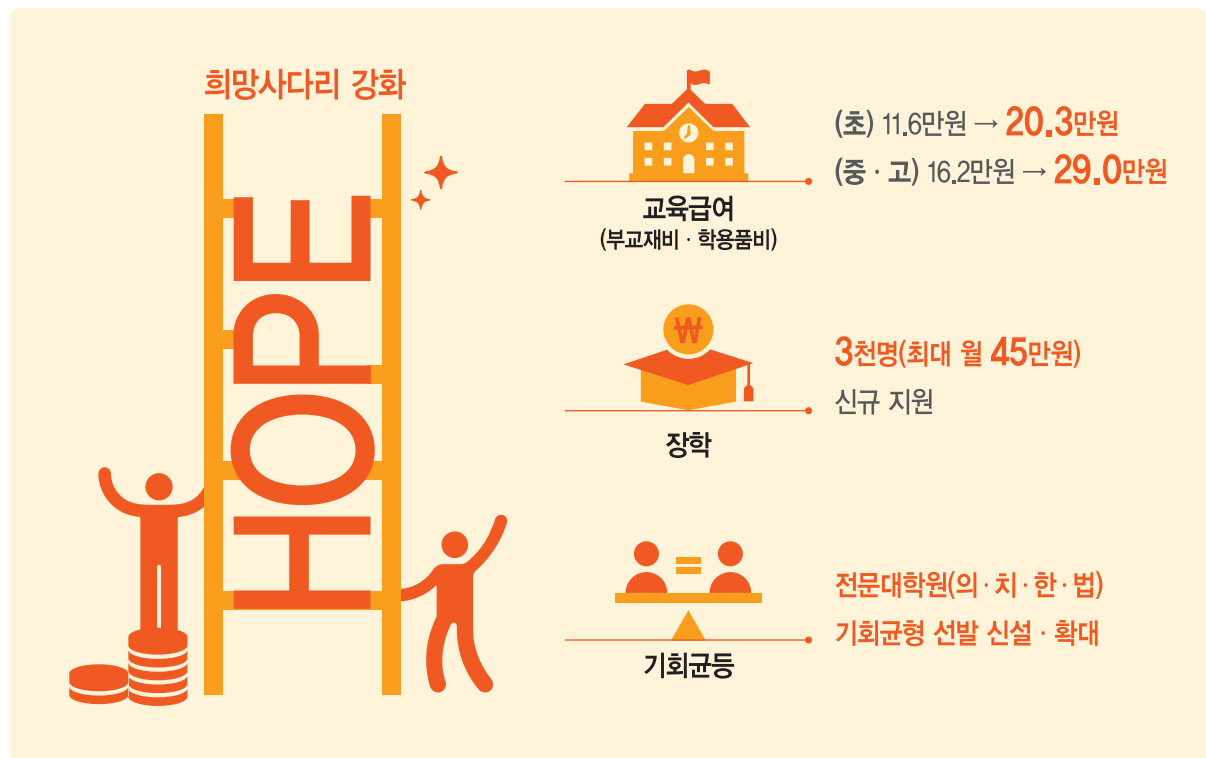
영세업자 두텁게 보호 + 건전한 재기 지원



영세업자 보호	
업종	임대차 등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건축시 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 허용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건전한 재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채권 채무조정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 · 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방안 마련

02 희망사다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대상	지원	'18년	'19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지원	18.8만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15.5만명 지원	25.5만명 지원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4만명 지원	8만명 지원
 여성	여성친화적 일자리	아이돌봄	2.3만명 지원
		노인돌봄	3.6만명 지원
		장애인지원	6.2만명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제지원	임신 · 출산 · 육아에 한정	결혼 · 자녀교육 추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2.5천명 신규 지원
	적합직무장려금	3천명 지원	5천명 지원
 어르신	노인일자리	51만명 지원	61만명 지원

최저임금, 탄력근로 보완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완충을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 마련·발표('18년 12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 인상(월 13만원 → 15만원)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저임금 결정구조 정부안 마련('19년 1월)
'20년 최저임금은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 종합 고려해 결정

- 주 52시간제 보완

 탄력 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방안 조속히 확정, 입법 추진
입법 전까지 주52시간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예: 현행 '18년 12월말 까지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입법 완료시까지)

03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 조성




	지원	'18년	'19년
 주거	공적임대주택	17,2만호	17,6만호
	월세 세액공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지원	일정 시가 이하인 경우도 지원
 교통	인프라	3조원 규모의 GTX A노선 건설 가속화	
	교통비	광역알뜰교통카드(교통비 30% 절감) 시범사업 확대	
 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MRI(북부, 흥부, 두경부)·초음파(비뇨기, 하복부, 생식기)·응급실 ·중환자실 등 급여화 확대	
 교육	반값 등록금	중위소득 120%까지	중위소득 130%까지
 환경	전기버스 보조금	150억원(150대)	300억원(300대)

04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다져나갑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지원		'18년	'19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연령 기준 폐지 재산·소득 요건 완화	
	최대지원액	단독가구	85만원	150만원
		홀벌이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00만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3.8만 가구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빈곤층 지원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 지원 강화

지원	'18년	'19년
 아동수당 (월 10만원)	소득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대상 220만명 지원	소득 무관, 만 7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대상 247만명 지원
 기초연금	20만원 지원	소득하위 20% 어르신은 월 30만원 지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이하	중위소득 44% 이하 지원 (+2.6만가구 지원)

사회보험 지원 확대


지원		'18년	'19년
 실업급여 지급액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평균임금의 60%
	자영업자	기준보수의 50%	기준보수의 60%
 실업급여 기간	임금노동자	90일 ~ 240일	120일 ~ 270일
	자영업자	90일 ~ 180일	120일 ~ 210일

'19년 7월 시행


05 정정당당한 경쟁과 경제주체간 상생을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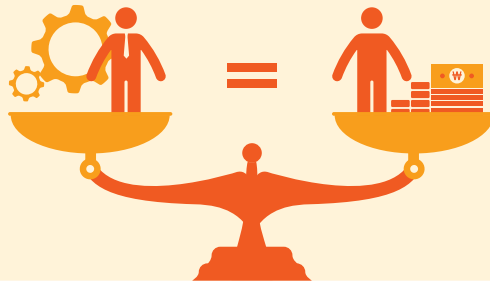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확대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사안에 한정하여 전속고발권 폐지

- 고질적 甲乙관계 해소, 공정거래 관행 정착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해외지식재산센터 확대



- 글로벌 콘텐츠기업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기업의 망 이용부담 완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다중대표소송 도입하여 경영권 견제 기능 강화

 자회사에 손해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에게 모회사 주주의 소송 제기 허용

-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하여 기업 내부감사의 책임성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 의무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부여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강화하며, 기업의 방어권 보장

 회계분식 금액의 20% 이내 등 → 절대금액 상관없이 과징금 부과
회계감리 과정에 변호사 입회 허용, 조사자료 열람·복사 허용 등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유도
- 협업이 사업화 되도록 협업전문회사 도입

 기업간 협업사업을 위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0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혁신선도 기술확보 통한 성장기반 마련

• 4차 산업혁명 대비 분야별 핵심 R&D 투자('19년)

산업혁신	지능형 반도체(300억원), 스마트공장(558억원), 지능형 로봇(407억원) 등
생활혁신	바이오헬스(1,423억원), 자율주행차(1,278억원), 스마트시티(954억원), 드론(634억원) 등
플랫폼혁신	데이터·AI(4,200억원), 수소경제(786억원) 등

• R&D 지원체계를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19년)

상 용	ICT 분야 R&D 바우처 사업 확대, R&D 펀드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선택권 강화
기 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 고위험·장기 R&D 신규 투자 확대
도 전	경쟁형 R&D 및 High Risk - High Return형 R&D 지원 확대

– 기술사업화 촉진펀드(300억원)를 통해 자금 지원



•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18년 47조원 → '19년 53조원) 확대

– ‘정책금융협의회’ 신설 → 자금공급실적 점검·공동지원기준 마련

현행 정책금융기관들의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기관간 의견을 실무 조정하는 ‘혁신성장 정책금융 지원단(가칭)’을 산업은행 내 설립

–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 구축('19년 2월)을 통한 중복지원 여부 판단, 자금지원 성과 분석

플랫폼 경제 등 산업간 융복합 활성화 위한 인프라 조성


•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시 최대 3% 세액공제

- 교통·국토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추진

 **마이데이터** | 정보주체(개인)의 동의하에 개인정보 내려받기 및 제3자 제공 허용

- AI 허브 구축('19년), 국내 AI 전문기업 100개 육성(~'22년)

 **AI 허브** | 인공지능의 응용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①AI 학습용 데이터, ②AI 알고리즘 ③AI 특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제공 등 인공지능 개발 환경을 지원


-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를 조성(~'22년)

–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입지) 준주거·상업지역 입지허용 등 (운영) 셀프충전 허용방안 마련('19년 3월) 등**

미래대비 혁신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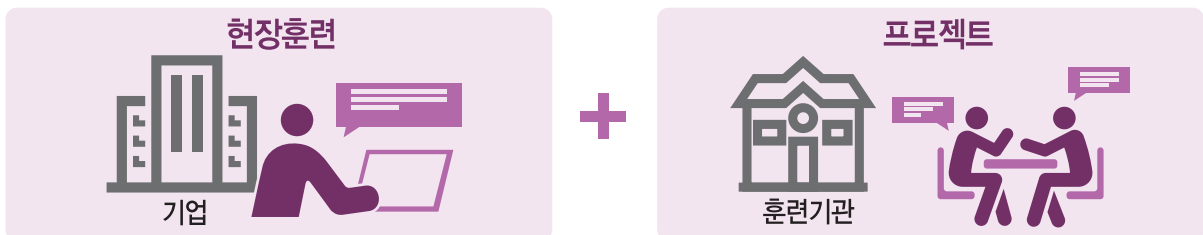
- SW 중심대학 확대(30개 → 35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19년 下)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학력·전공 등 제한 없이 선발하는 프로젝트형 비학위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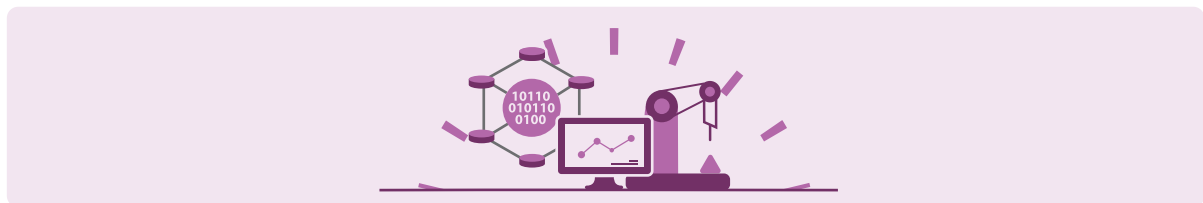
- 대학간 복수학위제 시행·확산('19년 경인지역 14개 대학 시행 예정 → 타 대학으로 확산 지원)

 **복수학위제** | 재학 중 서로 다른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 학위를 받는 제도

- 기업이 주도하는 첨단 융·복합 분야 직업훈련 도입방안 마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위주로 개편




– 혁신성장 청년인재(1,200명 → 1,400명)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확대(1,000명 → 1,300명)

-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전직 직업훈련 강화 병행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45세 미만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까지 확대**


– 신중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 확대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증설(10개 → 14개), 희망리턴패키지(0.9만명 → 2.2만명) 확대**

02저출산 ·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인구변화 대응 강화

- 국토, 노동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
 - 장래인구추계 주기 단축(5년 → 2년) 등
- 고급인재 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 신설('19년 上)

 고연봉, 고학력, 높은 전문경력을 소유한 학자 및 국제기업가, 고급기술인재에 체류기간 연장, 동반가족 편의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비자 신설


-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 국내 복귀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 강화

-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여성에 출산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출산 급여
월 50만원, 90일, '19년 7월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자




&

육아기 근로부모, 근로시간 하루 1시간 단축시
임금 삭감 없도록 자원 확대
(일 2~5시간 → 일 1~5시간, 상한 200만원)

일 2~5시간 → 일 1~5시간



-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확대

 의무설치 대상 확대(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와 함께 중소기업 설치지원 확대 검토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인상

 → 


배우자 출산 유급 휴가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5일분 급여 지원(한도 월 200만원)

&

두번째 육아휴직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증가

상한액 증가!

200만원 → 250만원



- 국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비율 목표(40%)를 1년 조기 달성('22년 → '21년)

03 남북경협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시 남북 협의 채널 본격 가동
- 북한의 국제금융기구(IMF, WB) 가입 지원
- 여건 조성시, 경협 사업 중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계적 추진
 -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 남북간 산림협력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 남북 공동특구 구상 구체화를 위한 공동조사·연구 등 추진



04 중장기 비전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19년 上)



- 중장기 도전요인 대응을 위해 '혁신성장·미래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